

# 전주시내 도서관 3곳 확충

### 시, 책 중심 도시조성 정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방안 등 도서관 발전계획 선정

전주시가 국가대표 책의 도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해 생활권 곳곳에 도서관을 확충하는 등 도서관 발전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전주시 도서관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책 중심 도시조성 정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수립과 발맞춰 전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으로 '책과 소통하고 시민이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제시했다. 또, △책 중심 도서관 △생활 속 도서관 △미래 및

출형 도서관의 3대 전략목표와 13개 주요과제를 선정·발표했다.

특히 향후 도서관 이용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전주 중심권에 1개 도서관을 신설하고, 서부권·북부권에 각각 1개 도서관 신설을 검토하는 등 향후 전주시민들의 생활권별로 총 15개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전주시 전역에 분포된 도서관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별 특화주제에 맞춘 디자인 및 공간구성 등 도서관을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문화가 이어지는 공간이자 이용자·운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이번 용역에서는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직접인용을 위한 아간 프로그램 강화 △시민 생활 방식에 따른 특화된 독서동아리 지원 △작은도서관 컨설팅 기구 구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지원방안 △50플러스 중년프로그램 발굴 등 생애주기별·계층별 독서진흥 정책방향과 도서관 특성화 전략 및 정보화 계획 등 새로운 도서관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의 효율적 건립과 개방형 창의도서관 재정비, 도서관·지역서점·출판사 등을 연계한 독서생태계 및 독서동아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독서공동체 확대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된 이번 용역을 통해 전주시 도서관 대내외의 환경 분석을 통해 도서관 비전 및 미래도서관의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도서관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전주시 도서관의 연도별 대응 전략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박용자 시 완산도서관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정책기조에 맞춘 연계목표를 설정하고 민선7기 전주시 시장방향을 위한 아간 프로그램 강화와 더불어 전주시가 지향하는 책 중심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도서관 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책 중심 도시조성 정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살기 좋은 서노송예술촌 만들기 '머리 맞대다'

### 전주시, 행정협의회 개최

전주시가 성매매결집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선미촌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합 관리해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14일 현대해상 5층에서 선미촌 도시재생사업인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관련부서간 업무를 공유하고 협의사항을 논의하는 '서노송예술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관련 부서 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각각 각 부서별로 추진해온 사업들을 공유하고, 사업별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는 향후에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각 사업별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서노송예술촌 행정협의회를 발족한 이후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힘써왔다.

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이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뿐 아니라 추진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60여 년 전 서노송동에 형성된 성매매결집지인 선미촌의 기능정환을 위해 2016년부터 폐·공가 매입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성광동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분야에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 금마 한 주택서 화재... 소화기 사용으로 초기진화

### 익산소방서, "연소 확대 전 소화기 이용자의 용기가 대형화재 막아"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10일 오전 7시경 익산 금마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계인이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진화로 큰 사고를 막았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주택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보여 관계인이 확인해 보니 화목보일러 옆의 가열된 연통과 매트리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신고한 것이다.

이번 화재는 다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관계인의 빠른 대처와 가정소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초

기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현석 현장대응단장은 "연소가 확대되기 전 소화기를 이용한 관계인의 신속한 대처와 용기가 대형화재를 막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비치와 올바른 사용법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체 진화에 성공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대상에 추천될 예정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자기와 소화기를 두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익산=장인현 기자

# 부안해경, 7~9월 선박사고 37척

전북 부안해경경찰서가 해양사고 분석을 통한 사고다발해역 집중관리로 인명사고 제로(0)화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9월까지 관내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37척(163명)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추진기 손상 등 안전저해 선박이 28척으로 전체사고 선박의 75%를 차지했고, 5대 해양사고에 해당하는 충돌·침수사고는 7척이다.

원인별로는 운항부주의 등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가 80%를 차지하였으며, 선종별로는 어선(60%) 레저선박(30%) 낚시배(10%)로 집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해양사고 다발해역 5개소에서 총 33건(90%)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로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 반려꽃·반려식물, 천만그루 정원도시서 만나요

### 전주시, 18~22일 '첫마중길 꽃마중 예술제' 개최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엔 나선 전주시가 화훼인들과 생활하는 반려식물과 반려꽃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연다.

전주시와 전주화훼인연합회 협동조합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주시 앞 첫마중길에서 '제3회 첫마중길 꽃마중 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에 어울리게 전주의 첫 관문인 전주역부터 첫마중길 290m 구간이 꽃을 테마로 국화 등 가을꽃과 화훼인이 디자인한 가드닝 작품 등 방문객들이 꽃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첫날 오후 5시에 개최되는 개막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키 작은 국화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진

행되며, 웨딩·한복쇼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준비됐다.

특히 올해 꽃마중 예술제에서는 전주지역 화훼인들이 가족처럼 애지중지 가꾸는 반려꽃과 반려식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첫마중길 곳곳에는 △봄(탄생의 신비 그리고 희망) △여름(아름다운 꽃을 피우다) △가을(가나인 여정의 황홀한 결실) △겨울(그리움 또한 그림움) 등 사람의 일생을 자연의 사계절로 표현한 가드닝작품이 전시되고, 꽃과 정원 작품인 △위더 밀러(찬란한 꽃물결) △전통혼례(청사초롱 불 밝힌다) 등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는 방문객을 위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으로 △꽃바구니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봉숭

아를들이기 등 3가지 꽃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꽃마중 예술제에서는 다육식물과 공중 대기식물 등 다양한 꽃 화분 합인 판매되며,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사람의 일생을 아름다운 꽃과 작품으로 표현해 정원도시 전주가 희망의 도시가 되도록 힘을 불어 넣고, 첫마중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전주시의 주요 문화행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마중길 옛 한양주유소~명주골케거리에서 오는 19일 '첫마중길 가을예술제'가 열릴 예정이며, 꽃마중 예술제를 찾은 시민과 여행객에게 프리마켓, 버스킹공연, 체험부스, 바자회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검찰 특수부, 오늘부터 '반부패수사부'

###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

오늘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공포·시행  
서울·대구·광주 3곳 남기고 형사부로 전환  
비위 발생시 법무부 장관 보고 규정 신설  
이달 중 인권보호수사규칙 상향해 제정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 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는 형사부 강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특수부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을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도 현재 '검사장이 정하는 사건의 수사'에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정했다.

현재 전국 7개 검찰청 중 폐지되는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도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의 검찰 실질화 계획도 밝혔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무부의 직접 검찰 사유도 추가해 법무부의 1차 검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검찰청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검찰 내 비위가 접수되면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감찰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야 하고, 법무부가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긴급성 등 요건을 기준으로 법무부의 1차 검찰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

동안 검찰 내 비위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웃을 벗은 사례가 계속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 조희시 해당 검찰청은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규명하는 등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징계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되지 않은 사례 등의 경우 법무부가 2차 검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현행 검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생략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장시간 및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1회 조사는 12시간(열말·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했다. 심야조사는 열말시간을 제외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로 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제한했다.

별건수사 남용 지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등 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부패범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토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등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관련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 "검찰 개혁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조국 장관, 사의 표명

### 검찰개혁 발표 직후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날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할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

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분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제도화가 제대로 오든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